

대학교수와 연구비

양근만 |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얼마 전 일이다. 서울 모 유명 대학 박사과정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대학원생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전날 신문에 난 기사에 다소 불만을 품은 듯했다. 이 대학원생은 '우리 학교가 연구비를 중앙관리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라면 몰라도 기업체에서 주는 연구비는 대부분 교수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기자가 '어느 학교인가' 묻자. 그는 '서울 시내 명문 대학의 공대'라고만 밝혔다. 그리고는 자신은 컴퓨터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있으며, 대학원에 5년 간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학원생이 생생히 전한 대학의 연구비 전용 실태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가령 기업에서 1억원짜리 프로젝트를 주었다고 합시다. 이중 대학이 10%를 떼고 나머지는 교수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주는 연구비는 학교 연구처에서 관리하지만 이것도 허술하기 그지 없지요. 박사과정에 있는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 영수증 만드는 게 일이에요. 기업에서 나오는 연구비는 교수 개인이 거저 먹는 돈이나 다름 없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등 기업에서는 아예 영수

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가라' 영수증을 어떻게 만드는 지도 소상히 설명해 주었다. '학교 앞 논문 복사하는 가게에 부탁하면 한뭉음을 가져다 줍니다. 몇 십만원을 사면 갖다주는 식이지요. 컴퓨터 같은 장비는 사지 않고도 산 것처럼 꾸밈니다.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장비 가격의 10%만 사면 '가라' 영수증을 줍니다. 만약 고가 장비가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0만원만 주면 영수증을 줍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는가'라고 기자의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듯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사 나올 경우를 대비해 모두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만약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업체에 미리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나올 날짜에 맞춰 해당 장비를 미리 갖다 놓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는 '현직 교수 중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 빌딩을 올린 사람도 있고, 8억짜리 집을 지었다는 얘기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자주 거론된다'며 씩씩해 했다.

'특히 컴퓨터나 정보통신 분야는 연구과제가 많아요. 교수 한사람당 수익 짜리부터 10억 짜리도 있어요. 보통 교수당 학생이 15~20명 붙게 되는데, 1년에 1억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이.'

기자가 굳이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대학사회를 비리와 부정의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례는 대학 전체의 모습이 아닌, 극히 일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이라고 기자는 믿고 싶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자락 들춰진, 대학사회에서의 연구비를 둘러싼 불쌍 사나운 모습은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친다는 느낌이다. 프로젝트를 따온 교수가 온갖 굳은 일을 다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응분의 보상인 연구비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하고, 그 일부를 어떤 이유에서건 사실상 '떼먹는다면' 무슨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분명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교수에게 자칫 이 같은 불만을 가지고 '대들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불이익 때문에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제자의 약점을 이용하려 했다면, 그는 더 이상 '교수'로 불릴 자격이 없다.

지난 해 하반기 '두뇌한국(BK)21' 지원금이 각 대학으로 나간 후에도 이 같은 잡음은 심심잡게 들려오고 있다. BK21 사업은 세계적 대학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원생이

자신의 몫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연구비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엄청난 국고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부가 이 같은 교수들의 연구비 '갈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있는 교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수들 스스로가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스승된 도리가 아닐까.

최근, 기자는 知人(지인)으로부터 대학교수로 있는 친구의 경우라며 들려준 이야기에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는 수년 전까지도 공과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있던 자신의 친구는 전세집에서 어렵게 살았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정식교수로 발령이 나면서 사정은 180도로 달라졌다. 그는 지금 강남에 6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산다는 것이다. 지인은 '교수가 무슨 큰돈을 벌길래 불과 몇 년만에 생활이 수직 상승할 수 있었을까. 연구 프로젝트가 많았던데 거기서 생긴 게 아닐까'고 반문했다. 솔직히 기자도 지인의 의문에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이다.

너무 대학의 부정적인 모습만 거론해 불만인 분들도 많을 것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대접은 남다르다. '군사 부일체'라는 유교의 영향이 크겠지만, 솔직히 말해 지나

치게 우대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게 기자 자신의 생각이다. 관료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에 오르는 술한 사례만 보더라도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막강하



다. 경험적으로 교수 출신 장관이 성공한 사례가 드문데도, 계속 교수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기자가 출입처로 다니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대학교수에 대해 별로 '존경심'이 없다고 스스로 없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교수들을 만나면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다. 관료들의 입장에서 '그 교수가 언제 높은 자리로 올지 어떻게 아느냐'며 웃어넘긴다.

기자가 대학, 특히 교수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자격 있는' 교수들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드문 것이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30대 중반을 넘긴 기자도, 교수인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만날 때마다 '교수들이 연구를 하지 않아 큰 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얼마 전 인터뷰를 한 김학준 인천대 총장 역시 '체대로 연구하는 교수는 자신이 보기에 극히 드문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의 경

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선 젊은 교수들의 상당수는 이혼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단지 우스개 소리로만 치부할 것인가. 대학사회도 연봉제, 계약제 도입과 더불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교수들까지도 대학만 들어가면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학생들처럼, 교수만 되면 연구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 **양근만**

양근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90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했다. 사회부, 수도권부, 영남취재본부, 월간조선, 문화부를 거쳐, 현재 사회부 소속 기자로 교육부를 출입하고 있으며, 지난 '97년부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